

동북아 경제블록 주도권 우리나라가 쥘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오는 9월로 개원 15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장현준 원장은 지난 7월 27일 에너지 관련 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에경연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취임 3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 원장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사업은 에너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게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에너지 이외에 철강 등 주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 비현실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한반도 주변정세와 기후변화협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에너지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에경연은 지난 6월 '제1회 국제 동북아 에너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에서 '동북아 전력부문 개발 국가간 협력'을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장현준 원장과의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 먼저 오는 8월 31일로 취임하신지 3주년을 맞이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맡아 경영을 해오신 그 동안의 소감과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3년 전, 그러니까 1998년 9월은 외환위기 후유증과 개혁정책으로 인한 다소간의 혼란 등으로 사회 전반이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낮은 경쟁력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선이 가장 따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처음 시작한 일은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일이었습니다.



장현준 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Illinois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기획예산위 개혁지문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위원(現) △(대통령 직속)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現) △전경련 환경위원회 위원(現) △에너지경제연구원장(現)

가슴아픈 일이었지만 정든 직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제게도 역시 부임 3년 중 가장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유연하게 한 덕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어떤 연구기관 못지 않은 경쟁력을 키워 올 수 있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에서부터 석유류 세제 개편, 그리고 최근의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 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남긴 발자취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9월로 설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연구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공포된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재출범한 상태입니다.

2001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4개 연구단(화석에너지연구단, 에너지수급동향연구단, 기후변화대책연구단, 전력연구단)을 해체하고 연구조정실을 신설,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연구인력은 본인의 고유 연구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프로젝트 등 연구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연구주제별로 대표적인 연구인력을 focal point로 지정하고 이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내부 brainstorming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향식 의견개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는 2001년 8월 현재 총 8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박사급 29명을 포함한 연구인력이 65명으로 전체 인원 중 연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구성은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함께 연구인력의 학위취득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 외부로부터의 우수인력 영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존의 연구자 중심적인 연구풍토를 과감히 혁신하고 보다 소비자 친화적 혹은 소비자 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연구관련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에는 동북아의 경제블록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상황 인식하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결성한 철강·석탄공동체에 비유할 수 있는 협력체로서, 동북아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경우,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블록의 주도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사명감을 갖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경쟁력 있는 연구결과를 대내외에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과감한 조직혁신과 인력관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부문에서는 어떤 조직도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예외가 아니며, 구성원 모두가 이런 사실을 잘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자신합니다.

❑ **원장님께서 최근 정부가 에너지소비합리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 기업과 가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런지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대안은 에너지가격 합리화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어떤 인센티브 제도나 페널티제도도 가격합리화 정책보다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게 에너지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내고 소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 낮은 에너지가격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치에 맞는 가격을 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비활동을 하는 자세입니다.

세수를 활용할 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우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합리화 자금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설비를 들이고자 하는 기업에게 값싼 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기업의 에너지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에너지소비합리화는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원원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ESCO 산업에 대한 지원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장기적인 차원의 전략으로서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R&D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현재 기술수준에서의 절약설비를 기업들이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보다 우수한 기술의 설비를 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는 것이 더 소망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에너지소비합리화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증대된 세수가 지원된다고 할 때, 과연 지원된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높습니다. 물론 현재도 사후적 평가기능은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다. 이를 통해 보다 적은 자금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절약 지원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식의 대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 **ESCO사업과 관련, ESCO협회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은 ESCO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보호육성이 절실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책적인 제언을 해주신다면?**

국내 ESCO사업은 '98년부터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ESCO사업은 주로 정부의 용자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수익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금을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ESCO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성 향상 및 유인체계 구축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금이 시장기능을 통해 ESCO사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ESCO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금융시스템의 여신제도 및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SCO사업의 수익률은 에너지가격, 에너지절약 기술력 및 자금조달(자금조달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민간자금을 의해 ESCO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절약 수단으로서 에너지가격이 합리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서도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둘째, 국내 ESCO업체의 진단 및 기술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SCO사업의 수익성은 에너지저감을 어떻게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저감은 종합적 진단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셋째, ESCO의 자금조달 능력 제고와 고객의 자금조달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ESCO는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ESCO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과 자금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ESCO사업은 고객이 투자비를 부담하는 성과보장방식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넷째,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 사업을 평가하여 절감량 및 설치설비를 담보로 대출하는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SCO의 상환부담 및 부채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비소구(또는 제한적 소구), 부외금융, 위험배분의 성격을 갖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기업 ESCO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ESCO사업의 특성상 투자가 늘어날 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약전문기업은 대기업 ESCO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ESCO사업 확대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투자자의 경제성, 투자 자금의 확보 등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 사업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ESCO를 위한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은 대대적인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이 이렇듯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데에는 내적 외적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적 요인으로 는 규모의 경제를 축소시키고 부문간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한 기술발전과 에너지산업의 전통적 구조로 인해 누적되어 온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산업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준 IT기술의 발전 및 시대적 조류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요약되는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도입은 지금까지의 에너지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합의됨으로써 시행을 눈앞에 둔 기후변화협약이나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각국의 환경규제 역시 에너지부문에 서는 커다란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 십 년간 에너지산업이 굳건히 유지해 왔던 수직결합적 기업구조, 국가소유 중심의 지배구조,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요약되는 산업특징은 서서히 해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직결합적 기업구조의 해체는 기술발전 및 이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에 힘입어 각각의 사업영역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소유 중심이었던 에너지산업의 지배구조는 각국의 민영화 정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독과점적 산업구조는 전세계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기업이나 개인이 막으려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기득권에 안주해 시장의 변화를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잃어버려 오히려 도태될 위험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새로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에너지부문의 거대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의 종사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